고건, 광주서 첫 민심투어 나선다

24일 '미래와 경제' 참석 신당 창당 등 피력
'정치 진원지'서 지지율 상승 바람불지 주목

유력 대권주자로서 정치행보를 본격화한 고 건 전 국무총리가 24일 광주에서 첫 민심투어에 나선다.

고 전 총리는 그동안 호남에서 높은 지지를 받아오면서도 특유의 신중함 탓인지 지역방문은 자제해왔다. 지난 5월 전남대 강연 이후 6개월여 만인 이번 광주행은 본격적인 대선행보 이후 처음이며, "국민통합 신당의 주춧돌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그가 직접적으로 유권자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고 전 총리는 이날 낮 도심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충장로 일대 상가를 돌면서 상인들을 만나 체감경기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듣는다. 또 대안으로 추진 중인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살핀다.

충장로 민심투어는 낮 12시 도청 앞에서 출발해 충장로 1가~충장로 2가~지하상가로 이어지며 전남도지사 재직 시절 시민들과 찾았던 '금남로뽐뿌집'에서 추어탕으로 오찬을 함께 한다.

고 전 총리는 이에 앞서 '문화의 전당' 홍보관을 방문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비상하려는 광주시의 비전을 살펴보고 자신이 1975년부터 3년여 도지사로 재직했던 전남도청을 탐방한다.

이날 방문의 표면적 목적은 자문그룹이자 싱크탱크인 '광주·전남 미래와 경제'(대표 최영관 전남대 명예교수) 창립대회 참석이다. 오후 3시 상무지구 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리는 창립행사는 상임부대표인 전태갑 전남대 교수의 '광주·전남의 미래와 경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고 전 총리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된다. 그는 격려사를 통해 국민통합신당 창당과 국가비전, 대북정책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와 지역협력위원장인 이영세 대구사이버대총장 등 다른 지역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다. 그를 지지하는 중도국민대통합전국청장년연대(약칭 중청련) 회원들도 광주·전남 조직역량을 총동원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고 전 총리가 스스로 '공부방'이라고 부르는 '미래와 경제'의 지방조직은 전북, 대구, 대전·충남, 충북, 부산에 이어 광주·전남이 여섯 번째다. 이달 말께 강원과 제주 지부까지 창립되면 전국조직화를 완료하게 된다.

김덕봉 공보특보는 "고 전 총리가 강연 등으로 몇 차례 광주를 찾았지만 민심 투어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라며 "정치적 변화의 진원지인 광주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범여권 정치무대의 주역으로 들어선 고 전 총리가 고비 때마다 '역사적 선택'을 해왔던 광주 민심 탐방을 통해 현재 15~20%대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한나라당 주최로 21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16개 시·도지사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호남 성장동력 예산 적극 지원

16개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

한나라당은 21일 국회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 16개 시·도 단체장을 초청,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한나라당이 당 소속 단체장 뿐아니라 민주당 등 다른 당 소속 단체장들까지 모아 의견을 수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재섭 대표를 비롯해 김형오 원내대표, 전재희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와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 16개 시·도 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간담회를 통해 당이 중점 추진중인 지역별 성장동력 확충 예산을 정확히 파악, 지원을 집중하고 수해예방 예산 등 민생예산 관련 후속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호남 관련 예산 지원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당의 전통적 불모지인 호남지역 민심잡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 자리에서 박광태 시장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종점을 동나주에서 광주 2순환도로로 연장(17㎞)해 줄 것과 첨단산단 2단계 진입도로 예산 추가 반영(47억원),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형오 원내대표와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광주와 전주를 잇따라 방문, 호남지역 지자체와 별도의 예산 관련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에 앞서 총리공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어 FTA(자유무역협정)는 가장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현안과제"라며 "농업, 농민, 농촌 등 '3농정책'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법원·검찰 4자회동 윤리강령 위반 검토"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21일 론스타 사건을 둘러싼 '법.검 갈등'의 와중에 법원과 검찰 고위간부 4명이 회동을 가진 것과 관련, "법관 윤리강령 위반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검 간부들의 회동이 법관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민주당 조순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징계받을 비위에 해당하는지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 처장은 또 회동에 참석한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영장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점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 대리인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해명하고 부적절한 언론 인터뷰에는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대법원장에게 말씀 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장 처장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영장의 향후 처리방향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연합뉴스

"권위 탈피 새 정치 질서 심었다" "이분법적 사고로 오만에 빠져"

■ 여야 소장파 의원 '386 공과' 평가 엇갈려
뉴스위크 "민주화 공로 있지만 한국 분열시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가 한국의 386세대가 민주화 운동을 이끈 공로가 있지만 무능력과 독단주의로 한국을 분열시키고 경제를 둔화시켰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여야 소장파 의원들은 386세대의 역할과 공과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 소장파 의원들은 386세대 정치인들이 과거의 권위주의에서 탈피,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정치권에 이식했다는 데는 공감했으나, 현 정부와 여당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386 정치인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21일 SBS 라디오에 출연, "386 세대가 처음 정치권에 진출할 때는 새로운 산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게 사실이고 거듭나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전대협 2기 의장 출신인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이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고 있다"면서 "수구 보수언론이 앞장서서 논리를 제공하고 있고, 뉴라이트와 한나라당이 연대해서 파상 공세를 펴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의 대표적 386주자인 원희룡 의원은 "참여정부의 핵심을 이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념적 잣대나 도덕적 우월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열린 마음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면서 문제의 해법을 찾기보다는 이분법적으로 사물을 보면서 오만에 빠진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소장파인 정병국 의원도 "386세대 정치인들이 권위주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한편, "그러나 대통령 스스로 386과 같은 생각을 갖고 정권을 운위하다 보니 결국 모든 잘못이 386의 잘못으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신호(27일자)를 통해 한국의 386세대는 민주화 운동을 이끈 공로가 있지만 무능력과 독단주의로 한국을 분열시켰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 포진해 있는 20여명의 386세대 정치인은 한국 정치에 분열을 일으키고 경제를 둔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1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정계복귀설에 대해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낮 12시 부산 금정구의 모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전 총재가)오랫동안 야당의 총재를 지냈고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인데 나라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 분이 말씀(정계은퇴)하신 게 있는데 주위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도리어 그분께 실례가 되는 것"이라며 이 전 총재의 정계복귀설을 경계했다. 또 박 전 대표는 당내 대권주자들의 경쟁에 대해서는 "이전 같으면 1년 전에는 각종 여론조사가 화제가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예년과 다른 것 같다"면서 "벌써부터 대선공약을 쏟아내고 조기과열되는 것은 나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갑-인명진 '전면전' 조짐

김의원 "인위원장 기피신청"
인위원장 " 반드시 징계"

한나라당 인명진 윤리위원장과 김용갑 의원간의 대립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김 의원은 21일 '인명진 윤리위원장을 기피신청한다'는 제목의 개인 논평을 내고 인 위원장이 라디오 출연 등을 통해 자신의 '자진 사퇴' 등을 거론한 데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것일뿐 아니라 사전에 언론에 공개적으로 (나를) 매도함으로써 개인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 위원장은 김 의원의 강경 대응에 개의치 않고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맞섰다. 인 위원장은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며 "윤리위원들의 투표에 의한 결정으로 징계 절차가 이미 개시된 만큼 무엇이든 징계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